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



보도	2023.11.09.(목) 조간	배포	2023.11.08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조사팀	책임자	팀 장	조현철	(02-3145-8470)
		담당자	조사역	박동구	(02-3145-8472)

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

“회사가 **증권을 발행**하여 **투자조합**으로부터 **청약을 받을 경우**
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”

1. 배경

□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**증권을 발행**(청약권유)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(모집)에 해당하여 **증권신고서를 제출**하여야 하나

○ 최근 초기창업·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*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

* 벤처·개인투자조합(「벤처투자법」) / 신기술사업투자조합(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) / 일반 조합(「민법」) 등

○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(과징금 등)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*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.

* ('20년) 1건 → ('21년) 2건 → ('22년) 2건 → ('23년) 4건

□ 그간 금융감독원은 「기업공시 실무안내」 책자 발간,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「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」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,

○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,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(GP)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.

2. 주요 위반사례 및 회사·투자자 유의사항

□ [사례 ①] 설립 3년 차 법인 甲은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원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(공모)

- 甲은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하여 8인에 대한 사모 증권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

➔ [유의사항]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(공모 해당 기준)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,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

-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(50인 이상)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.

□ [사례 ②] 벤처기업 乙은 20XX.9월~10월까지 2회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(공모)

증권 발행일	1차(9월)	2차(10월)	합계
청약권유 대상자	17인	41인	58인

- 乙은 증권 발행시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

➔ [유의사항] ①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자와 ②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*의 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합하여 총 50인 이상이고

* <예시> 같은 종류 증권 : 보통주 + 보통주(O) / 우선주 + 우선주(O) / 일반사채 + 전환사채(O)
 다른 종류 증권 : 보통주 + 우선주(X) / 보통주 + 사채(X)

- 그 합산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[사례 ③] 과거 우선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소규모 회사 丙은 신기술투자조합 1개 조합원 총 49인에 대하여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주 10억원을 발행

- 丙은 과거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모로 오인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

➔ **[유의사항]** 과거 같은 종류의 주식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이번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

-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경우, 전매제한조치*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<예시> 보호예수, 권리행사 금지 특약 등 (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)

3. 향후 대응방향

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대상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 추진

-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(중소벤처기업부·한국엔젤투자협회·여신금융협회 등)과 적극 협업하여,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·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
- 투자조합 업무매뉴얼(체크리스트 등)에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. (‘23.11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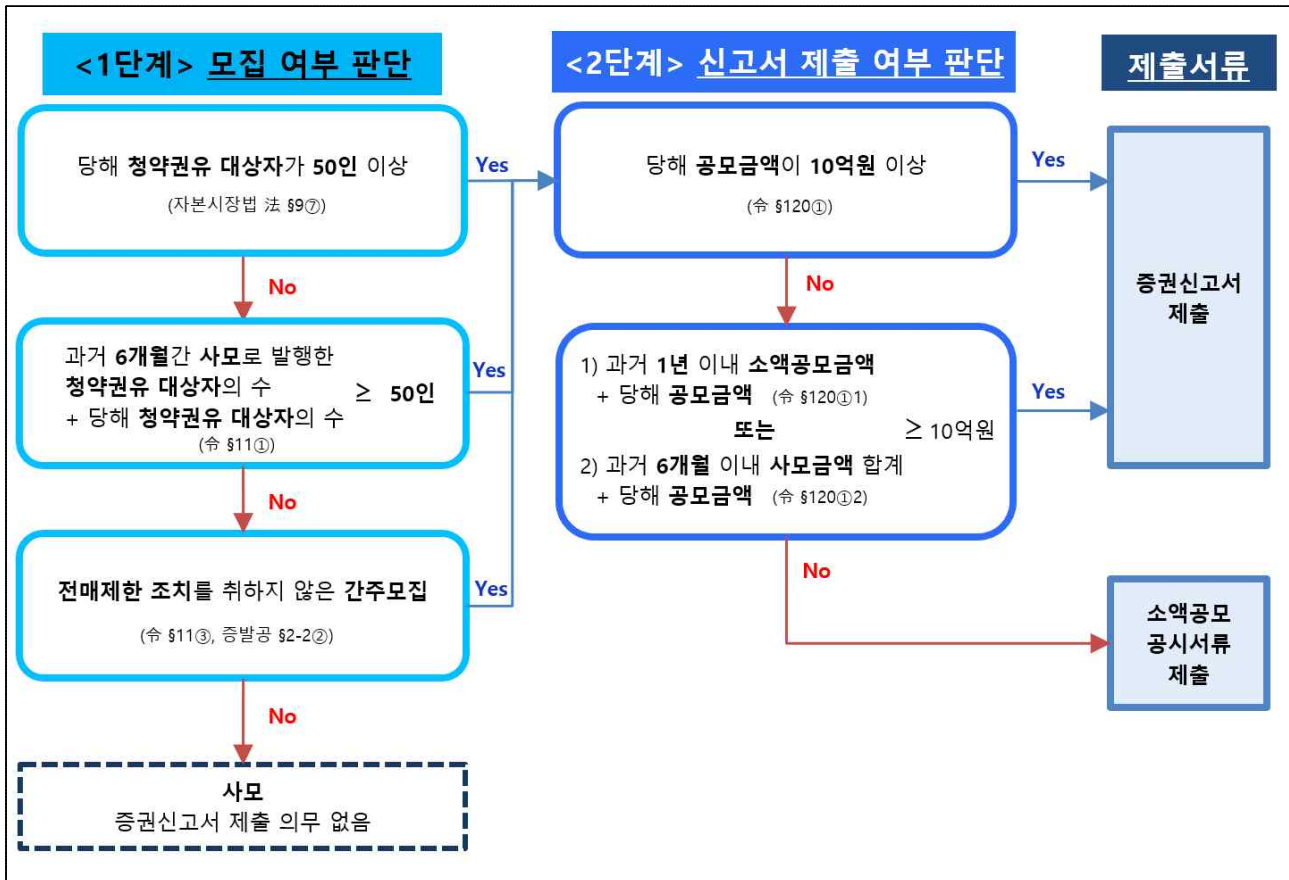
☐ 엄정한 공시조사 및 주의환기를 통한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

-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함과 더불어
- 중대·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

- 발행인은 증권발행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시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

-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(공모 해당 기준)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,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
-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(50인 이상)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
 -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(발행인)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께 주의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붙임2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■ 발행인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?

- 금융감독원은 '22.8월 발행인(공시의무자)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·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*을 정비하였습니다.

* §1-1-7 ⑧ 증권의 모집·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, 법인격이 없는 조합·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,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,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■ 조합 구성원 중 자본시장법상 전문가 및 연고자가 있는데 청약의 권유 대상 인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?

- 발행인은 발행 건별로 청약권유 대상이 5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

- 이때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1조 각호에 나열된 전문가 및 연고자를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

<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11① 각호) >

발행인의 최대주주, 5%이상 소유주주, 임원, 우리사주조합원, 계열회사, 계열회사의 임원,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,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발기인, 전문투자자, 회계법인, 신용평가업자 등

※ 수회의 발행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각각의 건별로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반복해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각각의 건에 포함되나, 6개월 이내 사모 청약권유 대상자 합산시에는 1인으로 계산*

* <예시> 甲의 경우 매 건에 포함되지만, 6개월 합산하여 판단할 때는 1인

증권발행일	2023.1.1.	2023.2.1.	2023.3.1.	2023.4.1.
청약권유대상자	甲+15명	甲+15명	甲+15명	甲+3명
개별 건의 공모 판단	16명	16명	16명	4명
합산하여 공모 판단	16명	31명	46명	49명

■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청약권유 받은 자를 합산하는 경우 '같은 종류의 증권'은 어떻게 판단하나요?

- ☐ 자본시장법은 6종*의 증권별 개념을 열거하고 있으므로, 열거된 개별 증권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합니다.

*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 (자본시장법 §4)

- ☐ 사채의 경우, 자본시장법은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하며

- 일반사채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은 사채권에 옵션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채로 봅니다.

- ☐ 주식의 경우,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(보통주, 우선주, 혼배주 등)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
- 또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은 전환대상 주식의 전매기준 해당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.*

* <예시>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, 과거 보통주를 공모한 실적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